“이전 부지, 소음 고통 시달린 시민 보상 위한 개발 이뤄져야”

광주 군공항 이전건의 공청회

이전 지역 선정이 사업 핵심

소음 최소화 신개념 공항으로

이르면 2017년 새 공항 건설 시작

광주시 이전 건의안 10월께 제출

2일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주시장과 김동철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문태환 시의회 부의장,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날 광주 군 공항 부지 면적 831만7000㎡를 주거·상업 등 기본기능과 함께 문화복지, 첨단산업연구개발, 공공행정 등이 포함된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솔마루 시티’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안)도 공개했다.

시는 또 군 공항 이전비용으로는 순수 이전비로 2조1000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500억원, 현 부지 개발사업 9000억원, 금융비용 2500억원 등 3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군 공항 이전 일정에 대해서는 ▲2014~2015년 이전건의서 제출·평가 ▲2015~2017년 이전 후보지 선정 ▲2017~2022년 이전 군 공항 건설 ▲2022~2025년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1~2025년 종전부지 개발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광주대 이명규 교수는 “군 공항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시점인 만큼 이전이 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이전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 패널도 참석한 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박사는 시민들에게 이전 후보 선정 과정과 기준을 소개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 선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기상상태·장애물지역 등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 확인, 2단계는 군사적 요건 충족 가능한 지역으로의 후보군 압축, 3단계는 후보군간 비교평가 후 최적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등 선정요건을 검토해 국방부장관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강 박사는 “새롭게 건설되는 군 공항은 소음피해 지역이 최소화돼야 하는 만큼 소음피해 구역을 매입하는 신개념 군 공항으로 건설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은 군 공항이 하루빨리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며,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온 광주 시민의 치유를 위한 보상개념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서구 덕흥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래인씨는 “군 전투기 소음으로 TV도 볼 수 없을 지경인데 최근에는 도심에 전투기와 헬기까지 추락해 불안감마저 크다”면서 “시민 모두가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은 군 공항 이전의 완성이 아니라 이전을 위한 출발이다”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을 건의서에 반영하고 이달 중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예산 확보, 여야 국회의원들 머리 맞댄다

오늘 국회 귀빈식당서 간담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3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광주·전남지역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의 참석 없이 국회의원들 간에 모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 외에 주영순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특히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간 협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등 지역 관심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강기정·김동철·장병완·권은희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새정치연합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시청 간부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선수촌 분산 건립 재검토는 행정낭비”

광주시의회, 市 정책방향 ‘제동’

市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재검토에 들어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분산 건립 등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과 김동찬(새정치·북구 5)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5기에 추진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분산 건립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재검토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윤 시장 민선6기 인수위에서 제기한 선수촌 아파트 분산 건립에 따른 안전관리·교통통제· 관리인력 증가 등에 따른 비경제성 등의 문제점은 도시재생과 구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산 건립의 재검토로 인한 지역갈등과 소모적 논란 불식, 특정지역에 집중 건립될 경우 구간 불균형 확대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만약 수영장이 있는 광산구의 신 도심 주변에 6000세대의 선수촌을 건설한다면 대회가 끝난 뒤 특정지역이 동구와 북구, 남구 등의 구도심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자치구간 불균형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이날 오랜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TF팀 구성과 예비 타당성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과의 대화, 정부 승인 취득절차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불명확한 재정소요에 근거해 시민 100인의 의견을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대표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KTX 광주역 진입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분산 건립 등을 예로 들면서 “모든 현안을 시민과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재검토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 지연과 예산 낭비, 행정 불신, 광주 이미지 훼손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윤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성된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검토 TF(테스크포스)팀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TF팀 구성과 관련한 편향 논란과 기능 우려를 밝히고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두가지 사업 모두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중”이라면서 “아직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수촌은 도심재생방식에 의한 현실적인 공정계획을 비롯해 지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며 “안전관리나 분산건립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4~5월 각 입지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술용역,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국제수영연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광주시는 “수요예측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수지분석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향후 재정부담 능력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짚어 보고 있다”면서 “현재는 TF팀과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같은 절차는 단순히 행정적 낭비가 아닌 오히려 시민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신 도심이 밀집한 광산구와 북구, 남구 일부 지역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서는 경기 시설 등이 전무한 북구와 동구 등이 유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영대회 선수촌 분산이냐 집중 건립이냐 등의 문제는 자치구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고 지역간 불균형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